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차원: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

임 경 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푸틴이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이 전쟁에는 두 개의 차원들의 변수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전쟁의 직접적 빌미가 된 NATO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즉 지정학적 경쟁, 군사 안보 전략의 충돌이라는 차원이다. 또 다른 차원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이다. 후자의 차원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해체, 새로이 독립한 국가들에서의 탈공산주의 이행, 러시아에서의 전제정 (autocracy)으로의 회귀와 같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뉴 밀레니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은 이 전쟁의 배경뿐만 아니라 전쟁의 종결 가능성이나 조건과 관련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세계질서관과 국가 주권의 평등성에 기초한 이상주의적 세계관의 충돌도 이 두 차원을 넘나들며 전개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핵무기를 지닌 강력한 독재국가가 주변국의 주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소비에트 체제 해체의 지연된 비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2022년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푸틴은 소련이 해체된 지 30주년이 되는 시점이었던 2021년 말부터 선전 작업과 군사력 배치 등의 전쟁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공공롭게도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을 평화롭게 해체한 주역들이다.

소련의 붕괴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와는 매우 다르게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구 소련 독립국가들이 국제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공화국마다 산재했던 디아스포라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간의 영토적 경계와 주권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전제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등의 독립 국가들이 보유하던 핵무기 해체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푸틴은 지난 30여 년간의 비교적 평화로웠던 유라시아에서의 이런 흐름을 완전히 뒤엎은 셈이다. 사실,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독립, 주권, 기존 국경에 대한 안전 보장에 합의한 1994년 부다페스트 의정서는 물론, 1997년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우호조약도 이미 2014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무효화된 상태였다.

2008년에도 러시아는 그루지아 대통령이던 사카쉬빌리(Mikheil Sakashvili)가 나토 가입 추진 등 친서방 정책을 펼치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며 그루지야를 침공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구 소련 독립 국가들의 영토적 경계와 주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푸틴의 의도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2021년 7월 푸틴은 자신의 논문에서 역사를 일방적으로 단순화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sup>1)</sup> 그는 우크라이나를 볼셰비키에 의해 만들어

1)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articles/66181>.

진 인위적 정치 단위일 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독자적인 국가성(statehood)을 부정해 왔는데, 대다수 러시아 국민도 이러한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작년 6월 9일 푸틴은 피터 대제 탄생 350주년 기념행사에서, 피터 대제의 대북방전쟁을 언급하며, 잃어버린 영토의 '수복'이라는 목표를 노골적으로 재차 천명하였다.

이렇게 푸틴은 30여 년 전 소련이 지녔던 영향력의 범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은 1968년 사회주의의 국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주권제한(일명 "Brezhnev Doctrine")을 내세우며 다른 바르샤바 조약기구 가입국들을 동원하여 동맹국 중 하나인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를 이탈하고자 하는, 러시아 스스로가 '형제'라고 부르는 국가에 대해 가차 없이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애쉬(Timothy Ash)가 지적하듯이, 푸틴은 주권의 평등성, 각국의 국경과 영토 그리고 동맹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천명한 1975년의 헬싱키 협정(Helsinki Final Act)을 부정하고 강대국들끼리 각각의 영향력의 범위(spheres of influence)를 나누어 국제 질서를 지배한 1945년 얄타 체제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sup>2)</sup>

## 러시아의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초래한 재앙

전쟁 발발 이후 침략국인 러시아에서는 독재가 더 강화되는 반면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하이브리드 정치체제였다.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인덱스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국가 중 86위로 세네갈이나 멕시코 수준의 정치체제였다. 러시아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부정부패도 만연해 있었다. 동부지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해 국민통합을 이루기도 매우 힘든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경쟁적 선거를 통해 6명의 대통령이 선출될 정도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집권세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사실상 '관리되는' 러시아나 루카센코 대통령이 무려 29년이나 장기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와 비교하면, 우크라이나의 이런 모습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구화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러시아에서 20여 년 가까이 진행된 독재화(autocratization)와 맞물려 있다. 러시아의 역사는 전제정과 대혼란('smuta': Time of Troubles)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잠시 열리는 듯하였으나, 결국 러시아는 다시 전제정으로 회귀하였다. 이러한 독재화는 푸틴이 200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내외적으로 '강한 국가' 회복이라는 명분 하에 서서히 그러나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푸틴의 독재화는 합헌적,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이른바 '스텔스 독재화'('stealth' autocratization)의 전형을 보여준다. 푸틴은 20세기의 '공포형'(fear) 독재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그는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고, 노골적 폭력보다는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정보 조작을 통해 자신이 민주적 지도자로 보이게 하는, 이른바 '변신형'(spin) 독재자의 모델이 되었다. 터키의 에르도안이나 헝가리의 오르반 등 다른 독재자들도 이러한 푸틴을 모방하고 있고, 심지어 서방 국가들에서조차 푸틴의 강한 지도자상(strongman leadership)을 부러워하는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들이 등장

2) Timothy Garton Ash, "Putin knows exactly what he wants in eastern Europe - unlike the west," *Guardian* (February 1, 2022).

하기에 이르렀다. 푸틴의 독재화 모델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정당하고 우월하며 강력한 '비자유주의적'(illiberal) 민주주의 모델로 선전되어 왔다. 이제 푸틴은 이 전쟁을 통해 극우민족주의 세력을 포섭하며 러시아 사회와 경제를 군사화하고 있다. 여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하는 등, 대내적 억압의 수준을 높이며 '공포형' 독재자의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독재화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러시아 국내 정치행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누가 러시아를 잃었는가?”라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1990년대 당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레토릭과는 완전히 다르게, 러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서방은 오로지 러시아가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린 정부 시기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가짜 민주주의를 묵인하는 한편 나토의 동진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 국민은 서방이 노리는 것은 러시아의 대혼란과 약화일 뿐이고, 서구식 민주주의는 허구 또는 음모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푸틴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한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 정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였다.

푸틴이 전격 침공을 감행한 배경에는 서방이 결국은 자신의 강수에 순응 또는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서방은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 라인을 넘지 않는 데 신경을 쓰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점에서 이 전쟁은 “누가 독재자 푸틴에 동조해 왔는가”라는 문제도 제기한다. 탈공산주의 이행 이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안보 위협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탈냉전 세계화가 안겨준 경제적 기회를 십분 활용하였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드에 의한 막대한 자본도피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렸다. 전통적으로 구 소련과 러시아에 대해 친화적이었던 독일 사민당 등의 유럽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세력들도 푸틴과 우호관계를 맺어 왔다. 이 전쟁은 핵무기까지 지닌 강력한 독재국가와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 ‘나쁜 평화’ vs ‘정의로운 승리’?

이 전쟁이 소모전(war of attrition)으로 전환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이나 평화 협상을 먼저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장악했던 영토의 절반 정도를 탈환했다. 아직도 양측 모두 서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전쟁은 거의 모든 면에서 푸틴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고 푸틴이 종전을 서두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초기 판단이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푸틴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다시 계산해가며 전략적 대응을 해왔다. 서방의 제재도 아직까지는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푸틴의 선택은 러시아를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이렇다 할 도전세력이 없는 독재자들은 무리가 되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가하면서, 장기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소한 러시아는 새로이 병합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의 정권교체나 키이우 점령과 같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푸틴은 이 전쟁을 더 장기화하며 일종의 ‘타협적 평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Sergei Guriev and Daniel Treisman, *Spin Dictator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22); “Sergei Guriev Says More...”, *Project Syndicate* (February 7, 2023).

다른 한편, 젤렌스키 정부는 전쟁의 목표를 '승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승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이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이번 전쟁 직전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른바 'small win')이거나 또는 2014년 이전 상태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big win')이다. 우크라이나가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사실 우크라이나로서는 승리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젤렌스키 정부는 2014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즉 크름을 수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다.

종전 또는 평화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개전 초기부터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체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현실 수용을 권고해 왔다.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작년 5월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한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 돌아가는 것'이란 2014년 러시아가 차지한 동부 돈바스 일부와 크름 반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영토 주권을 포기하라는 의미이다. 작년 봄 뉴욕 타임스 등도 젤렌스키 정부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미국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대를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미어시하이머(John Mearsheimer) 등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에게 치욕적 패배를 안기지 않는 것이 유럽 안정과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sup>4)</sup>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해 온 촘스키(Noam Chomsky)도 현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미국에 의해 도발된 것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중국적 패배 추구가 아니라 푸틴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sup>5)</sup>

이들에 반해 소로스(George Soros)나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등은 러시아를 조속히 패퇴시키는 것만이 제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고 자유주의 문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sup>6)</sup> 지젝(Slavoj Žižek)은 촘스키와 같은 좌파 평화론자의 논리가 마치 1940년 나치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던 이른바 '반제국주의적 평화주의자'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sup>7)</sup> 마찬가지로 폭정 연구로 유명한 스나이더(Timothy Snyder)는 1938년 서유럽 국가들이 나치에 의해 침략당한 체코슬로바키아를 쉽게 포기함으로써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상기해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여 폭정에 결연히 맞서 승리해야만 평화도 가능하다고 역설한다.<sup>8)</sup>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면 종전을 위해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논리를 한번 수용하면 종전 이후에 러시아가 또 다른 요구를 할 경우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또 다시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토 분할 이후 안정을 유지했던 2차 대전 이후의 독일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푸틴이 목표로 하는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전쟁 초기에 내건 '비무장화'(de-militarization) 조건까지 수용해야 한다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선택권이 없는 실패 국가(failed state)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군이 오데사까지 점령하여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리아로 연결되는 회랑을 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흑해 접근은 완전히 봉쇄된다. 푸틴이 노렸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크름 장악을 기반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대외 무역 루트를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

4) John Mearsheimer, "Playing With Fire in Ukraine: The Underappreciated Risks of Catastrophic Escalation," *Foreign Affairs* (August 17, 2022).

5) 촘스키의 입장에 관해서는 <https://chomsky.info/interviews/> 의 여러 인터뷰 참고.

6) Russia Matters, "Debate: Kissinger vs. Soros on Russia's War in Ukraine," <https://www.russiamatters.org/node/27728>; Francis Fukuyama, "Putin's War on the Liberal Order," *Financial Times*, March 4, 2022.

7) Slavoj Žižek, "The Betrayal of the Left," *Project-Syndicate*, July 11, 2022.

8) Timothy Snyder, "Ukraine Holds the Future: The War Between Democracy and Nihilism,"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2).

이런 우려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상을 중용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보다 우월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등 서방에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 탈환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젤렌스키는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 크림을 재탈환하겠다고 공언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훼손하는 평화 협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를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크림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 기रो에 선 자유민주진영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장기화하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서방의 자유민주진영이 개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이다. 유럽 내에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고, 또 유럽 각국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친러시아적 정파들이 존재한다. 이미 러시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발틱 3국, 폴란드, 핀란드 등 동부 유럽 국가들과 여타의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드러나 있다. 애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자체에 비판적이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 전쟁 장기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 등의 압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나, 아직은 서방 국가들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이 유럽 국가들에서 권위주의 성향의 우파 포퓰리즘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지금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으나, 헝가리, 세르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우파 포퓰리스트 정파에 대한 지지가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동정 또는 지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음모’나 실책,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방의 우파 포퓰리스트와 러시아는 이 전쟁과 관련된 허위정보 유포에 서로 협조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다행히도 최근 유럽에서의 우파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 폴란드와 헝가리의 집권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들 사이의 관계도 예전만 못한 상태이다.

다른 한편, 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은 이 전쟁을 서방의 또 다른 ‘위선’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취한 종교적, 인종주의적 차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전쟁은 백인과 기독교가 중심인 서방 국가들의 이중적 태도를 다시 확인시켜 줄 뿐이다. 서방 진영의 이러한 약점은 이 전쟁을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 구도로 치르고자 하는 미국, 영국 등의 의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러시아를 위한 무기 지원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두 국가는 ‘무한적인’(no limit)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줄곧 천명하고 있다. 터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비중 있는 국가들도 자유민주적 가치가 아니라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주엘라 등 ‘덜 나쁜’ 독재국가들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이들 독재국가 또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를 자처하는 국가들이 지정학적, 경제적 실리를 희생시키며 서방의 깃발 아래로 모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진영은 에너지 수입 문제나 무기 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일 자유민주진영이 이러한 단합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푸틴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황이나 종전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강력한 독재자들을 제어할 자유민주진영의 의지와 능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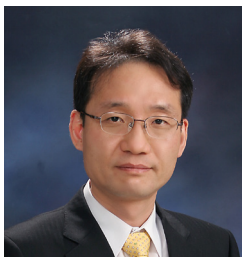
## 보이지 않는 출구

아직은 어느 나라도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 세력 내에서도 조기 종전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이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데 서방이 단합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의 지원과 국민의 항전 의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작년 가을 이후 곤궁에 빠트리기도 했다. 올해에 들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이지 우크라이나의 결정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도 러시아에게 굴욕적 패배를 안기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푸틴은 전면적인 동원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전쟁을 더 장기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퇴격한다는 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소모전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국한되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입는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정의로운 승리’로 이르는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협상을 해야 하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 주류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sup>9)</sup> 요컨대, ‘정의로운 평화’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이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회오리에 갇혀 버린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될지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여정도 이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따라 더 길고 험난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Stephen Walt, “The Perpetually Irrational Ukraine Debate,” *Foreign Policy* (November 29, 2022).

### 저자 소개 임 경 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의 클러스터 책임교수  
정치학 박사 (시카고대학교)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